

기윤실 포럼 4차 _ 내부자담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일시 : 2016년 8월 11일 (목) 오후5시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프로그램 | 발제 | 발제자 |
|-------|---------------------|-------------------|
| 인사/식사 | | |
| 발제 1 | 부동산 소득과 양극화 |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
| 발제 2 | 교육양극화 문제 | 송인수 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발제 3 |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 양희송 대표(청어람ARMC) |
| 발제 4 |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 최호윤 회계사(나눔과셈) |
| 발제 5 | | 내부발제자 |
| 종합토론 | | 참석자 |

- 발제 순서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발제시간은 10분이며, 발제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부동산소득과 양극화

남 기업 소장 | 토지 + 자유 연구소

□ 불평등 심화의 근인(根因) : 왜곡된 관계의 구조화

-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 1995년 이후부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및 자본소득분배율 상승
- 정규직-비정규직의 관계, 대기업 노동-중소기업 노동의 관계
 -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중소기업 노동자(81%)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19%)의 60%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착취) 관계
- 부동산소유자-부동산비소유자의 관계
 - 가장 소홀하게 취급받는 양극화 요인

□ 부동산불로소득 추산

단위 : %, 조 원

| 연도 | 매매차익(A) | 순귀속소득(B) | 부동산불로 소득 (A+B) | (A+B)/GDP |
|------|---------|----------|----------------------|-----------|
| 2007 | 273.8 | 72.2 | 346 | 33.2 |
| 2008 | 270.2 | 58.8 | 329 | 29.8 |
| 2009 | 266.4 | 89.2 | 355.6 | 30.9 |
| 2010 | 269.4 | 99.1 | 368.5 | 29.1 |
| 2011 | 267.1 | 97 | 364.1 | 27.3 |
| 2012 | 239 | 96.2 | 335.2 | 24.3 |
| 2013 | 185.5 | 109.5 | 295 | 20.6 |
| 2014 | 175.2 | 123.8 | 299 | 20.1 |

자료: 한국은행(ecos.bok.or.kr); 『지방세정연감』(각 년)

□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동산불로소득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하위 20%보다 2010년 72.9배, 2014년 75.0배로 높아졌음. 게다가 무주택가구가 50% 가까이 됨.
- 토지소유불평등 또한 극심. 2013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소유 비율이 무려 97.3%나 됨. 또한 대한민국 총 세대 2,021만에서 1,211만 세대만, 즉 59.9%세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0.1%세대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음.
- 이런 부동산소유 통계로 미뤄보면 앞에서 추산한 부동산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은 극소수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므로 부동산은 양극화의 주된 원인

□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방안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강화
- 순귀속소득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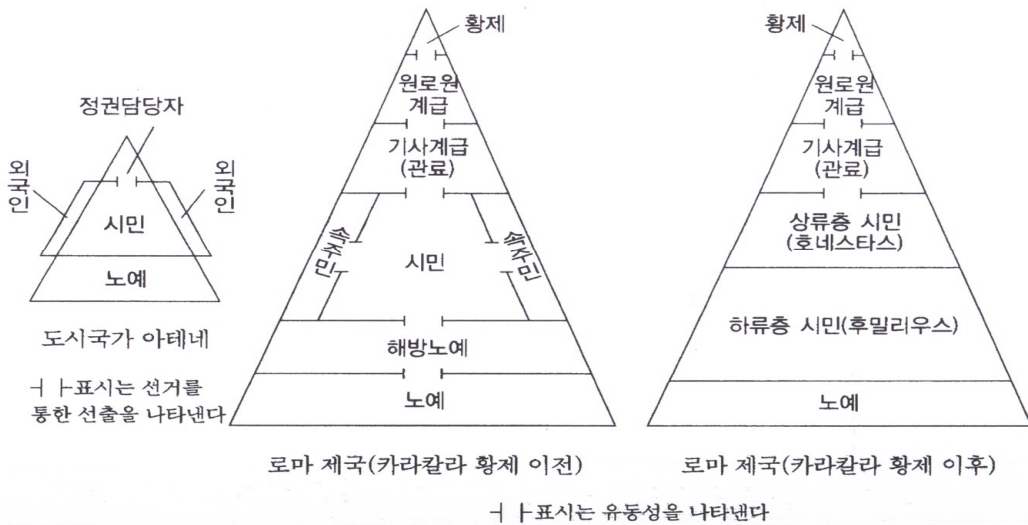
□ 양극화 현상에 기윤실과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

- 성경적 경제윤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 제시
- 십일조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역 전개

교육 양극화 문제

송인수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사회가 안정성을 갖게 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특권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국가란 그로 인해 기해지는 차별과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존재임.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강자의 부당한 힘의 행사를 용인한다는 말인데, 이는 국가가 존재할 필요를 부정하는 것임. 따라서 정상적 국가에 있어서 양극화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교육 영역은 과거 양극화 해소의 매우 중요한 디딤판 역할을 했음. 국제사회도 교육이 양극화 해소, 혹은 계층 상승 이동의 통로로 한국 교육이 기여했음을 지적했음.

3. 그러나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갈수록 난제가 되어 가고 있음. 그 시점은 일반적으로 2000년 들어 손학규 경기도 지사 시절 양산 및 그로 인한 지자체의 경쟁적 개교 등으로 특목고가 많아지면서 참여 정부 시절을 기점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무너지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고를 양산한 MB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심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에 따라 이 경쟁 속에서 이기

기 위한 진도 경쟁(선행학습 경쟁)도 2000년 초반 특목고 입시 정책과 연계되어 그 부작용으로 심화되어 왔음.

4. 나향욱 전 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발언'은 과거 반상 제도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특권층의 특권 확보 경로(사립초→국제중→자사고/특목고→SKY대 →고소득 전문직, 고위 공무원 집단 진입)를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실제로 이런 특권 경로 속에 들어간 계층의 학생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입시 제도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음.

5. 최근 학벌없는사회 해산을 계기로, 학벌도 계층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용도가 다 했고 이제는 자본이 우위에 선 시대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신분 상승을 위해 학벌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벌 위에 자본을 얹어야 된다는, 즉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여전히 학벌은 필요함.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제1원인을 '채용 과정에서 학벌 차별의 관행'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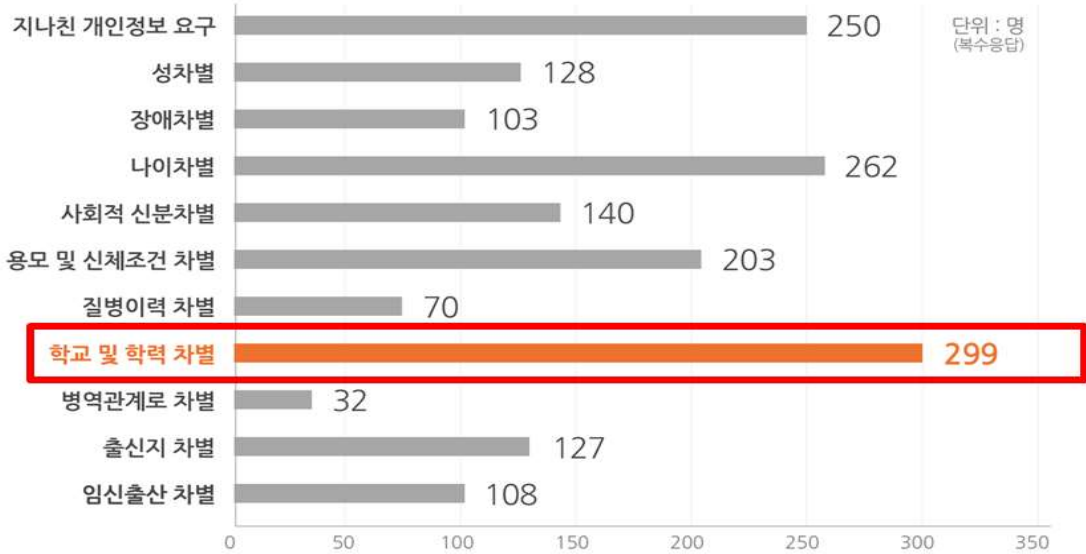
국민들, "출신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

-통계청, 2014년 발표

| 순 위 | 내 용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1 |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 4.15 | 4.20 | 4.20 | 4.10 | 4.10 |
| 2 |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 4.05~3.95 | 3.70 | 4.20 | 4.10 | 4.10 |
| 3 |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 4.02 | 4.20 | 4.10 | 4.10 | 4.00 |
| 4 |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때문 | | 4.10 | 4.00 | 3.90 | 3.90 |
| 5 | 사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 | 3.70 | 3.70 | 3.60 | 3.60 |
| 6 |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려워서 | | | 3.70 | 3.60 | 3.50 |
| 7 |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 | 3.70 | 3.60 | 3.50 | 3.50 |
| 8 |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 | | 3.30 | 3.30 | 3.30 |
| 9 |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 | | 3.20 | 3.20 | 3.20 |
| 10 |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 | | 3.20 | 3.20 | 3.10 |
| 11 | 학교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 | 3.90 | 3.00 | 3.00 | 3.00 |
| 12 |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 | | 2.80 | 2.70 | 2.70 |

2) 교육개발원 및 국가 인권위 등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한 차별 실태로 ‘학벌 차별’이 가장 높았고, 또 학벌 차별이 퇴조할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

채용관행의 개선점(복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2011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2011

3) 한양대 로스쿨 등에서 출신학교 학벌에 따라 지원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등급표를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음.

○○대 로스쿨 2014학년도 서류종합 평가기준

*○○은 입수한 문건에서 지워진 부분임.

| 항목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 성실성 | ○○○, SKY법·비법, 의치한, 과기원, 포항 공대, 경찰대 | ○○○, ○○, 이화 법학 | ○○·이화○○, ○○·○○·경희·외대·시립대,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법학 | 기타 법학 | 기타 비법 |
| 적성 및 자질 | 35점 | 31.5점 | 28점 | 24.5점 | 21점 |
| | | 리트 140 이상 | 리트 115 이상 | 리트 90 이상 | 21점 |
| 전문 소양 | 25점 | 22.5점 | 20점 | 17.5점 | 15점 |
| | 자격증(의사, 변리사, 회계사) *언어 Excellent | 자격증(노무사, 법무사) | 자격증 無 | | |

4) 연세대 등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특기자 전형을 허용함.(외국어 이수 단위를 외고 수준으로 높여서 일반고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함.)

2017학년도 특정고교 우대 전형

| | |
|--------------|---|
| 인문학인재 계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고 인문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 영어, 제2외국어(국제교과 포함)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가 45단위 이상인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는 인문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 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 사회과학인재 계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사회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영어, 사회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 영어, 국제교과(제2외국어 포함)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가 45단위 이상인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는 사회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 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 과학공학인재 계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학공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과학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 수학, 과학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인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는 과학공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 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5) 사교육비 증가 비율의 계층 양극화

※ 2015년과 2016년(각 1/4분기 기준) 통계청 조사, 소득 계층별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차이

| 영역 | 소득 분위 | 2015 1/4분기 | 2016 1/4분기 |
|----------|-------------|------------------------|------------------------|
| 학생학원비 지출 | 1분위(최저소득층) | 2.7만원 | 2.6만원 |
| | 10분위(최고소득층) | 36.8만원 (1분위의 13.5배) | 34.9만원 (1분위의 13.2배) |

2015년 1/4분기, 2016년 1/4분기 기준, 소득 1분위(저소득층)와 소득 10분위(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각각 2.7만원(2015년), 2.6만원(2016년)에서 각각 36.8만원(2015년), 34.9만원(2016년)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13.2배~13.5배의 차이가 났음. (통계청 조사 결과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가공)

6)기타

남녀 학벌은 결혼점수 핵심 요소



6. 교육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로 1)상급학교 입시와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경쟁 과정에서의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2)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준다하더라도 그 결과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때 이를 보정해주는 접근(사배자, 지방인재육성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35%를 지방대 출신자들에게 제 공함, 고졸출신자들을 채용과정에서 20% 할애 등)의 접근 방법이 있음. 1)과 2)는 동시에 추진해야할 교육의 영역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두가지 정책 혹은 법률임.

사회 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양 희 송 대표 | 청어람ARMC

1. 현실

- 사례: 일베와 메갈리안, 성주 싸드(THAAD) 배치
- 한국사회는 좌우 대립, 세대 갈등을 비롯, 젠더, 인종, 종교, 계층 등 모든 잠재적 대립전선에서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노동 내부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임대인/임차인 갈등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 이런 갈등을 해소/해결로 이끄는 언어와 행동이 거의 실종되어 있고, 오히려 언론과 시민사회 내에 갈등의 심화/격화로 이끄는 언행이 지배적이다. (cf.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의혹 등) 이는 온라인 공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공작적 개입의 흔적이 있다. (cf. 장강명의 <댓글 부대>)

2. 분석

- 이 모든 사회적 정서의 극단화는 일차적으로는 경제불안과 안전우려 등 사회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는 흐름도 분명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개신교계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일차 행동을 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여론 형성과 갈등해소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때 이 지점이 중요하다.
- 보수/진보 구분에 쉽게 끌려들어가지 말 것. ‘도덕성을 자극하는 기반이 보수와 진보에서 달리 나타난다. 좌파의 도덕적 기반은 ‘배려(care)/피해(harm)’, ‘공평성(fairness)/부정(cheating)’이란 두 가지 패러다임에 주로 근거하고 있는 데 반해 우파의 도덕적 기반은 ‘충성심(loyalty)/배신(betrayal)’, ‘권위(authority)/전복(subversion)’, ‘고귀함(sanctity)/추함(degradation)’을 중요하게 활용한다. ‘자유(liberty)/압제(oppression)’ 패러다임은 좌우파가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 특히 혐오와 증오의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 것. (참고: 강준만 <증오 상업주의>, 김찬호 <모멸감>,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등)

3. 대안 모색

- 개신교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거나 주도하려면 자기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반성의 내용에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고: 강성호 <한국 기독교 흑역사>(짓다, 2016),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2012))
- 개신교에 양극화 해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적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신앙적 논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참고: 양희송 <이매진 주빌리>(메디치, 2016))
- 양극화 이슈들에 개입하여 성과를 낼 때까지 집중하는 사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참고: ‘청년부채’, ‘혐오’, ‘젠더’, ‘부패’ 등)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최 호 윤 회계사 | 나눔과셈

1. 사전적 개념

- 가) Bio-polarization: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
- 나) 경제적부문-사회(주거,의료,교육)부문순환구조 => 가치관영역으로 확장
- 다) '불균등' vs '양극화'
- 라) 문제점:집단간 반감/적대사: 공동체감 파괴(= 변화/이동의 장벽을 전제

2. 변화/이동장벽 원인

- 가) 가진 것(재물,재능, 관계)의 사유화/고착화
- 나) 가진 것의 대물림
- 다) 사회구조적 한계

3.성경의제안

- 가) (구약)희년제도
- 나) (신약)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 (cf: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수익배분의 평등은 실현되나,고통분담의 이슈로 좌초되는 사례)

4.비영리 영역

- 가) 구조적 기초에 따른 차이:관계형 조직과 미션형 조직
 - ① 명망가 중심 출범(미션형 조직도관계형조직으로 변질 위험 상존)
 - ② 정부부처 주변 부서형

나)기업 주도형과 민간 후원형

- ① 그룹/연계기업: 지속적/주기적 후원
- ② 민간 후원: 거액 후원구조 유혹

다)거액후원구조와 풀뿌리 후원구조(거액기준:금액 비중에 비례하는 인원 비중)

라)확보된 후원구조와 후원자의 무관심

- ① 후원자가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음
- ② (대형)조직규모와 외형 구조에 따른 신뢰감 v
- ③ (대형)자금력과 인원을 바탕으로한 후원자 서비스 품질 차이

마) 상호무관심한 합리적인 인간의 조직체로서 동일한 연장선의 비영리조직

5. 개선 방향성

가) 경제적 공유보다 가치관, Know-how, 인력 공유로 확대필요

나) 후원자소통의 구조적 변화

다) 후원자의 주체자로서의 인식 변화(기부통계는 기부'행위'에 방점이 있는 상황)

라) 후원자를 대하는 단체의 인식변화(현금출납기)

마) 구조적 소통장(field, tool) 마련

6. 비영리 조직의 양극화 해소와 기윤실

가) 후원자 인식변화 운동

나) 후원자를 통한 비영리 조직 개선

발행일 _ 2016년 8월 11일

발행인 _ 홍정길

편집 _ 박진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